



권영선 교수, KAIST 경영과학과

지방공공요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2012. 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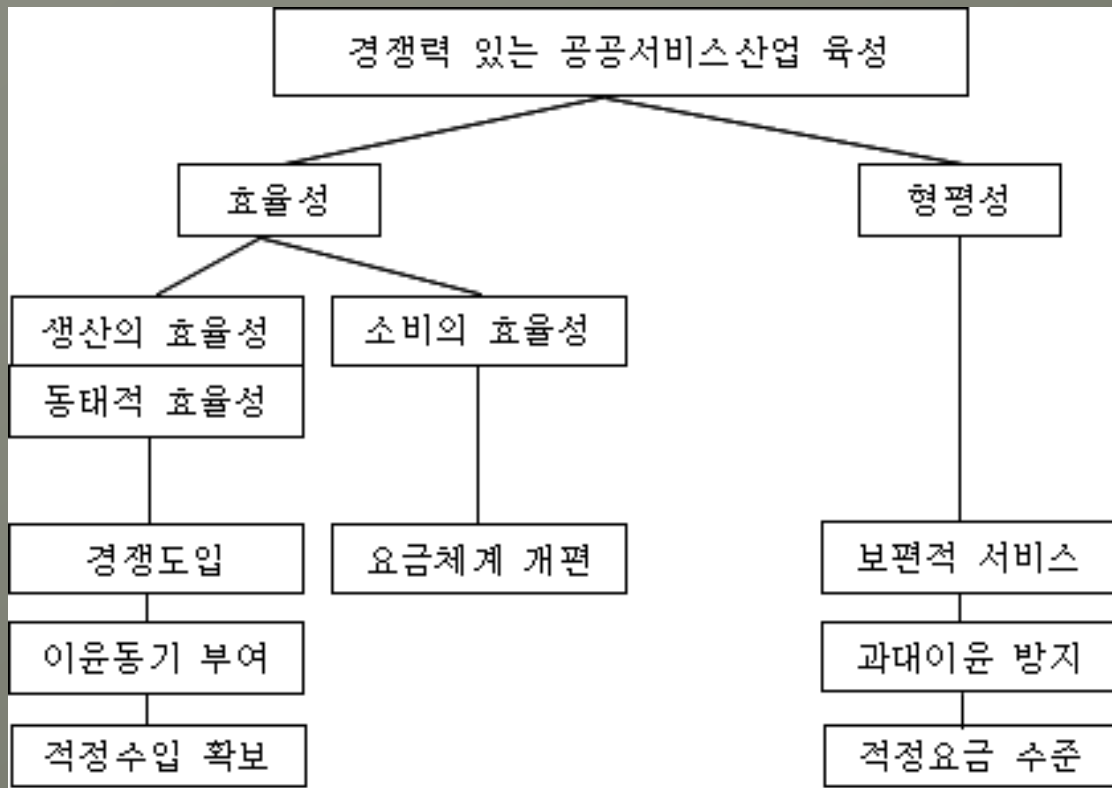
KAIST

목 차

- 1 지방공공요금 조정 체계.....●
- 2 현행 공공요금 규제제도의 문제점.....●
- 3 제도 개선방안.....●

1. 지방 공공요금 조정체계

-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것



1. 지방 공공요금 조정체계

- 사례: 전력요금과 관련한 부처간 견해차
 - 기획재정부
 -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 만큼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을 억제해야
 - 지식경제부
 - 강추위로 전력소비 급증 → 에너지 과소비
 - 요금인상을 통한 수요절약 필요, 원가보상

1. 지방 공공요금 조정체계

- 공공서비스산업 규제기관의 목적
 - 경쟁이 곤란하고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의 가격규제를 통한 소비자이익 증진
 - 경쟁을 통한 소비자 보호

1. 지방 공공요금 조정체계

- 지방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1/1000 = 0.0541\%$
 - 가중치는 크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중요한 서비스임

지방 공공요금	가중치	지방 공공요금	가중치
도시가스료(소매)	1.61	하수도료	0.18
시내버스료	1.14	쓰리게봉투료	0.17
고등학교 납입금	0.79	정화조청소료	0.05
상수도료(소매)	0.60	공연예술관람료	0.02
택시료	0.48	문화시설입장료	0.01
지하철료	0.36	총 계	5.41

1. 지방 공공요금 조정체계

- 요금변경 신청을 받아 검증 용역 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지방공공요금 결정 절차(道 시내버스료 예시)

◇ 요금변경 신청(버스조합) ⇒ 검증용역(道) ⇒ 의견수렴(道)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道) ⇒ 요금기준·요금결정(道) ⇒ 시·군 통보 ⇒ 신고수리(시·군)

- 소비자보호조례(충청남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제19조)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호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률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행정기관이 직접규제: 자문위원회 활용
 - 공공요금 조정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의 장이 요금을 결정함
 - (공급자의) 정치적 압력, 중앙정부의 압력을 받기 쉬움
 - 자문위원회의 심의에 기속력이 없기 때문
 - 선진국은 대개 독립규제위원회 활용
 -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예외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요금인상 억제 위주의 규제제도
 - 원가상승 요인 발생시 인상심의의를 통해 결정하나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반대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요구할 유인이 없음
 - 시군간의 비교평가를 통한 유인규제: 야드스틱 규제(성과비교평가 규제)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성과를 비교해서 우수한 실적을 낸 시군에게 보상을 주고, 성과가 낮은 시군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규제방식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공무원. 이외에 공무원 2명이 당연직 위원
 - 정치적 압력, 행정적 편의성이 우선될 위험
 - 요금심의를 심도있게 지원할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 1회성 검증 용역에 의존
 - 피규제기관의 회계정보를 검토 및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객관성 확보 필요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충청남도물가관리팀설 및 운영의 문제점
 - 지방물가를 책임 관리(제2조): 물가는 행정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결정됨 → 중앙은행의 역할임
 - 불가능한 것을 하려는 것임
 - 수많은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 행안부, 시도
 - 원유가 상승 → 원부자재 가격 및 유통비용 증가 →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 어떻게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을 행정적으로 억제하나?
 - 개인서비스 요금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소비자보호조례에 규정된 규제대상 물가의 지나친 포괄적 규정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호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도 개선방안

- 해야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 일반적 물가관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됨
 -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은 시장에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규제할 근거가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듯(?)
 - 충청남도물가관리팀설치운영규정은 필요 없음
 - 소비자보호조례의 규제대상 요금 명확화

3. 제도 개선방안

- 독립규제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검토
 -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운영 → 임명은 도지사와 도의회가 하되, 위원장은 도지가 임명하고 임기보장을 통해 인사상 독립
 - 사무국을 두어 주용 지방공공서비스 산업의 경영상태 및 회계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축적 →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과학적, 대칭적 규제
 - 소비자 후생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의결에 대해 기속력 부여 → 도지사 재의권

3. 제도 개선방안

- 시도간의 성과평가 비교제도를 통해 시도간 공공서비스의 제공의 효율성 확보
- 규제요금 범위 검토: 유선TV수신료 등 지역 독점사업에 대한 규제 검토, 주차요금은 규제해야 하나?
- 형평성과 효과성의 효율적 조합을 위한 부분 종량제도
 - 필수 소비량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 부과, 그 이상 소비량에 대해서는 높은 종량요금



권영선 교수, yokwon@kaist.ac.kr

Thank You !